‘세계청년대회=선교대회’…특별법 제정은 ‘위헌’

여야의원 70명 특별법 2안 발의
단발 종교행사에 역대급 지원해
정부지원위에 국무위원까지 배치
행사 시설 2037년까지 국비 지원
헌법 상 ‘정교분리’ 원칙 무시해
“사실상 가톨릭 위한 지원특별법
전 종교인이 나서 상정 막아야”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천주교 대표 국제 행사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은 명칭 자체에선 전 세계 청년들을 위한 대회처럼 보이지만 대회 전반에서 고해성사, 미사 등이 진행돼 실상은 천주교식 예배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가 나서 특정 종교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다종교 사회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특정 종교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은 국회 여야 의원 총 70여 명의 주도로 11월 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두 법안에서는 세금 감면, 시설 사업비 지원 등 법적·물적 공공자산이 세계청년대회에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59명이 11월 7일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하천법·도로법·수도법 등 부담금 감면(제9조) △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제10조) △장관급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구성(제18조) △국가·지자체의 대회 관련 시설 개축·보수 사업비 지원(제19조) 등이 명시돼 있다. 발의된 법안은 세금 감면, 매입의무 면제, 사업비 지원 등 대회 운영의 편의를 위한 조항이 대부분이다.

특히 제18조(정부지원위원회)는 국가장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항에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장관 16명을 명단에 포함했다. 국가고위 공직자를 끌어들여 대회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단발성 종교행사를 위한 지원위원회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1급 공무원들을 대거 배치한 것은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흐린다”면서 “앞선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한 국가들에서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가 없어 정교분리 헌법 위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된 후 7월 28일 발대식이 개최됐다. 사진은 cpbcTV 라이브 방송 캡쳐.

11월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11명이 발의한 특별법안 제26조(후속사업)에는 세계청년대회 이후 조성될 국제순례지의 시설(체험장, 전시관, 시설 진입도로, 응급의료시설, 전기·전자·통신·가스 시설)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또한 부칙에 해당 법안은 203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서술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 행사에서 파생된 시설 측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대회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발의에 앞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법안 효력의 항구성을 노렸다. 19일 발의된 법안의 부칙에는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회 종료 후 조직위원회인 재단법인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효력이 계속 이어져 천주교 시설 일체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게 된다.

조계종 종회의원 만당 스님은 “2차로 발의된 법안의 부칙에는 특별법이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했는데, 이것은 조직위원회인 재단법인이 유지되는 한 천주교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어진다고 못 박는 사항”이라며 “종교 행사인 세계청년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법령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항구성을 보장하는 부칙까지 포함한 특별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건 천주교 선교 목적이 뚜렷하며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세계청년대회는 한국 개최가 확정된 준비 단계부터 천주교 교리 전파 성격이 강했다. 7월 28일에 개최된 세계청년대회 발대식에서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세계 젊은이들이 대회에 모여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지훈 청년대표도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과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종교적 의도를 드러냈다.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곧 특정 종교 지원과 일치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심지어 가톨릭신문 등에서는 다종교 사회에서 모든 종교를 아우르기 위해 “조직위원회 법인 이사진에 조계종 스님, 기독교 목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역시 자칫 모든 종교계가 세계청년대회의 취지와 관련 법안 발의 등 전반을 찬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높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향문 스님은 “만약 처음부터 행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위원회 구성원들을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선임했어야 한다”며 “법인에 타 종교인들이 포함됐다고 해서 특정 종교 행사가 공공성을 가진 보편적인 행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향후 불교계는 공공재의 종교적 사용과 헌법 수호를 위해 전 종교계가 나서 특별법을 제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이자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종교행사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 우대로 비춰져 다종교 사회인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한국의 전 종교계가 나서서 성명을 내고 법안을 제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계종, ‘사찰’ 이모지 도입 대책 마련한다

12월 6일, 종교편향특위회의
“종단 차원 대응책 마련 필요“
사회부 공모 통한 도입 추진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문자코드 ‘이모지’에 불교 사찰이 제외된 점이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조계종에서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편특위)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교 상징 이모지 도입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종편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본지가 보도한 ‘삼성 갤럭시 이모지엔 ‘불교 사찰’이 없다’ ‘전 세계 이모지서 ‘사찰’ 왜 누락됐나’ 등을 언급하며 사안을 공유했다.

선광 스님은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가 사용 가능한 문자코드 ‘이모지’에 불교를 상징하는 이모지가 없는 것은 명백한 종교 편향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불교계 차원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광 스님은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 사용하는 기호 중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없는 것은 불교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현대불교신문의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한국불교와 종단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불교 사찰’ 이모지가 도입되게끔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유니코드 협회는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모지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이모지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힌두교 신자들이 2017년 공모에 참여해 2019년 힌두교 사원 이모지 도입에 성공한 바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이모지에 ‘불교 사찰’을 구현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 종교 다양성 현실화를 위한 시작점일 수 있다”면서 “사회부 차원에서도 유니코드 협회와 접촉하며 진행되는 이모지 공모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7년 천주교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 △신천지의 불교 이미지 도용 △차량 내장 내비게이션 내 사찰 검색 불가 △해미읍성·홍주읍성 천주교 성지화 등의 종교 편향 사안을 알리고 대응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종편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찾지 못하는 종교 편향 사안은 언제든지 누구나 적극적으로 종편특위에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가령 기자

이병두 원장 “주어사지, 종교화합 성지 만들자”

역사바로세우기 학술세미나서
“여론 통해 천주교 압박” 강조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는 1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천진암-주어사지 종교갈등 해결을 위한 실체적 접근’을 주제로 역사바로세우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발표 발제자로 나선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위원장〈사진〉은 천주교 성지화 매진 배경을 설명한 후, 주어사지 성지화에 대한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는 불교 사찰인 경기도 광주 천진암과 여주 주어사에서 강학회가 이뤄지면서 뿌리를 내렸다는 게 통설이다. 목숨을 걸고 서학(천주학)을 강학케 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이뤄진 일방적인 천주교의 성지화는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주어사지를 종교화합의 성지로 만들 것을 지자체와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여주시가 주어사를 둘러싼 천주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이곳을 ‘종교적 관용과 화합’을 상징하는 범종교적 성지로 만든다면 주어사는 세계적인 성지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불교와 천주교의 협조를 받아 국가 주도로 종교화합의 성소(聖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민관합동협의기구를 구성해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대화를 이어간다면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한국 천주교의 과도한 성지화를 막기 위한 ‘시민공론의 장’ 구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전국 수많은 도로에 ‘순교 성지’ 표지판을 고동색으로 표시해뒀다. 고동색 표지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이처럼 중앙과 지방정부가 천주교 순교 사업에 편중된 자세를 보이는 데 시민들의 공론(公論)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기자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4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4 생명살림 법회(조계사)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2월 22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내 용 : 화두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남전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 문 의 : 02-737-7378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